

취재요청

사무실주소 : 인천시 부평구 대정로80 2층 | ic.kmwu.kr | 기관지 ilabor.org | 전화 032-524-7574, 팩스 506-9938

지부장: 두대선 | 문의: 금속노조 인천지부 교육선전부장 권명숙 010-5698-5570

국민의 이익을 위해, 연기금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 분할에 단호하게 반대하라

29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에서 긴급기자회견 개최 공적연기금의 반대권 행사 촉구, 노조 투쟁계획 설명

개요

- 제목: 현대중공업 2대 주주 국민연금공단의 임시주주총회 물적분할 거부권행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5월 29일(수) 14시
- 장소: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사(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75 한화생명빌딩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 발언순서
 - 금속노조 인천지부 두대선지부장
 -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인화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현대중공업 재벌의 법인분할 임시주주총회를 저지하기위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노동자들은 28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또한, 오는 31일 주총이 예정된 울산 한마음회관 건물을 둘러싸고 완강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분할 저지 투쟁은 현대중공업지부를 넘어 법인분할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를 우려하는 지역주민 전체의 투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미 올해 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조선산업의 회생발전이 아니라 재벌에 대한 특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반대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현대중공업의 상황과 법인분할이 한국경제와 조선산업 생태계에 끼칠 위험을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왜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에 반대하는지 밝히고, 특히 국민경제와 조선산업의 미래발전을 위해 현

대중공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기금이 다가오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제안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 28일 결정한 금속노조 투쟁방침에 복무하는 인천지부의 결의를 언론과 시민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 주주총회 저지 금속노조 긴급투쟁지침

1. 현대중공업지부의 주주총회장 점거 농성 돌입에 따라 금속노조는 5월 28일부터 비상투쟁에 돌입한다.
2. 농성장에 대한 경찰력 침탈, 경비와 용역 침탈 등 정부와 사측의 도발시 인근지부는 비상결집하고, 위원장이 비상중집을 소집해 금속노조 총파업방침을 논의한다.
3. 현대중공업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물적분할 거부권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29일(수) 오전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 지사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각지부는 비상운영위 등 현중투쟁상황을 공유하고 투쟁을 조직한다.
4. 울산지역 조합원은 현대중공업지부의 농성투쟁을 엄호하기 위해 29일(수) 17시까지 농성장으로 집결해 지역본부 결의대회와 19시 촛불문화제에 참가한다.
5. 금속노조 각 지부 및 지회는 교섭을 중단하고 전체 확대간부 및 조합원은 5월 30일(목)~31일(금) 1박 2일 현대중공업 주총저지 투쟁에 총력결집하며, 30일(목) 영남권은 13시, 그 외 지부는 15시까지 노숙준비를 해서 집결한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연기금은 현대중공업의 분할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복지와 노후를 위한 사회보험이다. 국민연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노동자의 노동이 하루하루 쌓여 만든 공적 자산이다. 국민연금은 이윤과 이익이 아니라 민주, 평등,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렇다. 국민연금은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재벌이 주주총회를 열고 멀쩡한 회사를 쪼개고, 알맹이는 모두 챙겨 서울로 올라가려한다. 현대중공업은 이윤과 이익을 위해 조선소를 하청생산기지로 만들려 한다. 지난 반세기 노동자의 피로 쌓아올린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트리려 한다. 회사의 구성원과 가족, 지역주민, 하청업체 모두의 생존을 외면하고 총수일가의 이익만 챙기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금속노조는 묻는다.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국민연금의 존재와 의의와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현대중공업의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대답은 명백하다. 국민연금, 그리고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현대중공업의 제안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혀야 한다. 현대중공업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반대 의결권 행사를 주저하지 말라.

연기금은 가입자의 이익과 자산의 보전과 확대를 위해 존재하고 이를 위해 운용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공공기관이 그 유지와 운용의 책임을 진다. 그리고 공적연금은 당연히에도 공공성,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 국민연금 661만 주, 사학연금 13만 주, 공무원연금 8만 주는 현대중공업 지분의 10%다. 대주주로서 공적연기금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미 3개 공적 연금의 유지와 운용을 담당하는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사학연금지부, 공무원연금공단 노조가 반대의결권 행사를 촉구했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자들인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법인 분할을 저지하겠다는 금속노조의 주장에 함께하고 있다.

공적연기금은 국민의 이익과 공공성을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원칙으로 해야 한다. 대우조선의 재벌특혜 헐값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는 국민의 이익도, 공공성도 지켜내지 못하는 재벌총수일가만을 위한 결정일 뿐이다. 금속노조는 묻는다. 공적연기금은 사주 일가의 편에 설 것인가, 노동자와 함께 공공대중의 편에 설 것인가.

2019년 5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중공업 법적 분할, 대우조선 매각 반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법적 분할 반대 공적연기금 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5월 27일(월) 11시

○ 장소: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해양매각반대지역경제살리기경남대책
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중당 노동당 정의당노동이당당헌나라본부 노동전선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노동자연대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구속노동자회 민주
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월혁명회 학술단체협의회 진보
평론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
가독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한국
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27시대연구원

[문의]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석 010-3237-5940

금속노조 정책부장 안민지 010-6228-0074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노동자 구조조정 위협, 지역경제 파탄 대우조선 매각 반대, 현대중공업 법적 분할 반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분할계획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

오는 31일로 예정된 현대중공업의 임시주주총회에 소위 분할계획서 의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분할계획은 현대중공업 재벌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를 원활하게 하고, 현대중공업 재벌총수일가의 지분과 이익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우조선 인수에 따라 수반될 수 있는 경영권 승계의 위험을 회피하고 정몽준에서 정기선으로의 3세 세습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총수일가의 이익 구조를 강화하고 리스크와 주요 채무는 손자 자회사가 될 현대중공업과 인수할 대우조선 등에 떠넘기는 방식인 것이다.

이미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대우조선 매각의 문제점을 솔하게 지적하여 왔다. 대우조선과 조선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파탄 가능성은 물론, 수천에 달하는 대우조선 협력 기자재업체, 하청 업체들의 몰락, 지금도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수만의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직면하게 될 구조 조정의 위협 등 대우조선 매각이 야기할 문제점은 차고 넘쳤다. 물론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헐값에 재벌그룹에 넘기는 것 역시 그간 반복해온, 비용과 희생은 노동자와 정부, 사회가 부담하고, 그렇게 희생한 기업은 다른 재벌그룹이 이익과 성과를 내는데 돌려진다는 공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재벌그룹은 이러한 대우조선 매각과 인수와 경영권 세습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자체를 법적으로 분리하여 더 큰 이익을 남기는 중간지주회사와 위험 부담과 비용을 떠안은 선박제조 자회사로 분할하려 한다. 이번 주주총회의 이른바 분할계획 의안이다.

현대중공업에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기금도 상당한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현재 국민연금이 약 661만 주, 사학연금이 13만여 주, 공무원연금이 8만여 주 등 전체 주식의 10%에 가까운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공적연기금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시장 한편에서 이야기하는 동반부실의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현대중공업 주식가치의 상승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대우조선 인수를 확실히 하는 분할계획 건에, 재벌총수일가의 이익구조 강화와 3세로의 경영권 세습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이 안건에 찬성 의결해야 하는가? 그것이 공적연기금의 역할이요, 지향하는 원칙에 부합하는가?

연기금은 가입자의 이익과 자산의 보전과 확대를 위해 존재하고 이를 위해 운용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공공기관이 그 유지와 운용의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 공적연금은 당연히 하계도 공공성, 공익을 최우선 가치의 하나로 상정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작년 7월 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즉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정치권력,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 스스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원칙’이라 밝히고 있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역시 국민연금과 함께 주요한 공적연금으로서 ‘안정성과 수익성이 양호한 자산에 연기금을 운용하되, 공공성을 함께 고려해 운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연기금의 역할과 운용 원칙에 비추어, 이번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분할계획 의안에 대해 3개 공적연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운용된다는 국민연금이 지역사회를 파탄으로 내몰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그리고 나아가 국내 조선산업 전반의 생태계 붕괴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대우조선의 재벌특혜 혈값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 그리고 이를 원활하게 하고 재벌총수일가의 이익 강화와 경영권 세습 안정화를 위한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건에 그저 찬성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그리고 다수가 민주노총 조합원인 대학 및 대학병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노동자들의 연금 자산으로 운용되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기금이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 자명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기반 조성을 위한 법인 분할 건에 찬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3개 공적 연금의 유지와 운용을 담당하는 연금공단들의 노동조합은 물론,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기금 조성에 기여하는 가입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등 노동조합과 함께, 시민사회와 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법인 분할계획 의안에 대한 3개 공적연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공적연기금은 국민의 이익과 공공성을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원칙으로 해야 한다. 대우조선의 재벌특혜 혈값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는 국민의 이익도, 공공성도 지켜내지 못하는 재벌총수일가만을 위한 결정일 뿐이다.

1/ 3개 공적연기금은 국민의 이익과 공공성 사수의 원칙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와 법인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분할계획 의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

1/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재벌만 살찌우는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 반대한다!

2019년 5월 27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사학연금지부,
공무원연금공단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대우조선해양매각반대지역경제실리|경남대책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중당 노동당 정의당노동이당당한국본부 노동전선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노동자연대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구속노동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월혁명회 학술단체협의회 진보평론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 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27시대연구원]

1.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

- 물적 분할은 분할(기존) 회사가 어떤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자신의 자회사로 만드는 것, 즉 분할은 분할회사의 주주들이 분할된 각각 회사의 주주가 되지만 물적 분할은 기존 회사가 100% 주주가 되는 것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사업부문 등을 제외한 조선 사업부문, 특수선 사업부문, 해양플랜트 사업부문, 엔진기계 사업부문을 단순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칭, 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 회사는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가칭)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기로 한다.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이며, 분할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 물적 분할 역시 분할과 관계없이 기존 채무 등은 연대 책임을 지는 것
- 자산과 부채의 분할은 명확하게 해당 사업부문에 귀속되는 것 외에는 이사회가 결정

2. 자산과 부채 분할의 불균형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한국조선해양(주))	(현대중공업(주))
I. 유동자산	7,904,679	1,389,827	6,514,852
현금및현금성자산	1,637,251	880,419	756,832
단기금융자산	860,402	84,440	775,96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514,178	38,686	1,475,492
계약자산	1,634,840	-	1,634,84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372,048	372,048	-
II. 비유동자산	10,955,135	9,986,666	6,634,476
종속기업,관계기업 등 투자	2,862,291	8,528,298	-
장기금융자산	105,500	105,472	28
투자부동산	167,016	164,008	3,008
유형자산	7,006,290	771,509	6,234,781
자산총계	18,859,814	11,376,493	13,149,328

- 현금 등은 한국조선해양이 가져가면서, 금융부채(차입금)은 모두 현대중공업에 넘겨놓음.
- 사실 금융부채들은 사업을 위해 차입한 것도 있지만, 자회사 주식 등 투자를 위해 차입을 한 것도 작지 않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를 균형있게 분할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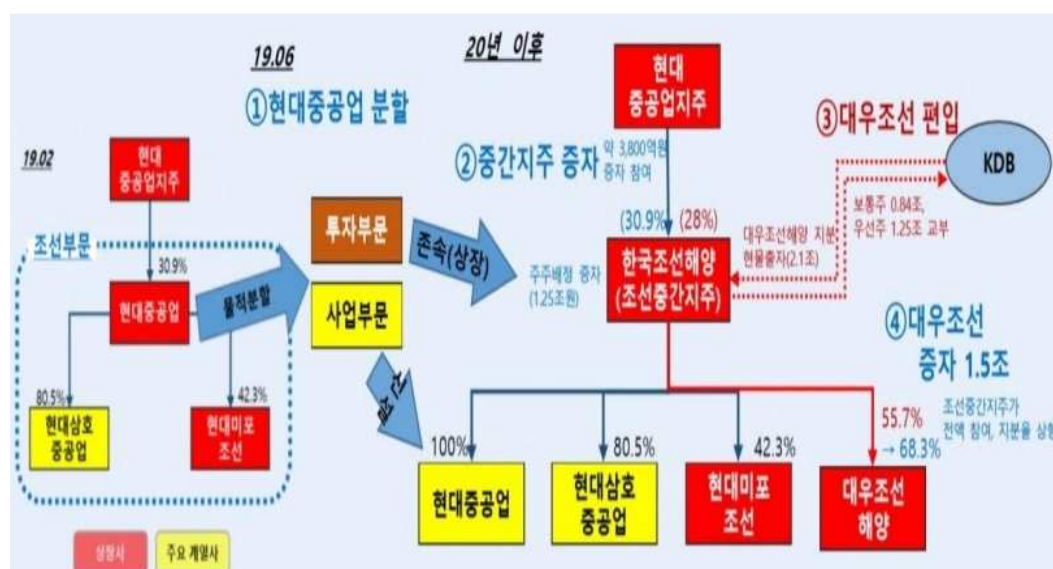
1)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의 문제점과 대우조선 인수가 조선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국회토론회”(2019.5.20.) 자료집 중 송덕용 회계사의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 매각 문제’ 발제문 발췌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한국조선해양주)	(현대중공업주)
I. 유동부채	5,632,975	90,792	5,542,183
단기금융부채	1,539,604	5,229	1,534,37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544,858	33,226	1,511,632
계약부채	1,818,187	52,337	1,765,850
유동충당부채	658,988	-	658,988
II. 비유동부채	1,588,606	76,057	1,512,549
장기금융부채	769,973	55,230	714,743
비유동충당부채	701,298	12,740	688,558
부채총계	7,221,581	166,849	7,054,732
I.자본금	345,827	345,827	345,827
VI.이익잉여금	16,263,304	17,024,846	-
자본총계	11,638,233	11,209,644	6,094,596
부채 및 자본총계	18,859,814	11,376,493	13,149,328

- 그 결과 현대중공업에는 이익잉여금이 남지 않음.
- 한국조선해양의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는 분할 전에 비해 매우 좋은 반면, 현대중공업은 분할 전에 비해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임.
- 이와 같은 불균형 분할재무구조로 자산을 분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른 현금 필요성(유상증가 참여 등)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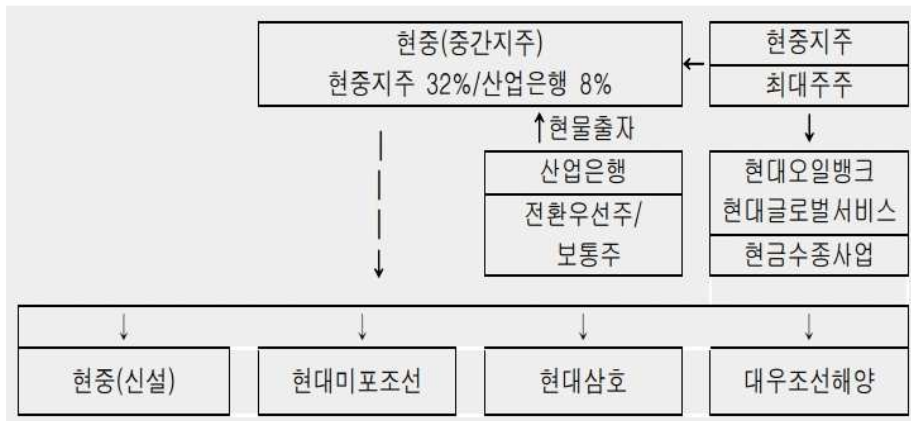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한국조선해양주)	(현대중공업주)
유동비율	140.3%	1530.8%	117.6%
부채비율	62.1%	1.5%	115.8%

3. 분할 후 현대중공업 그룹 지배구조 변화



△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후 지배구조 : 이투데이(한국신용평가) 2019.4.24.

- 가장 중요한 결과는 최상위 모회사인 현중지주 직접 자회사들이 현금수증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반면 위험은 축소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것.



4. 분할의 목적

- 회사가 주장하는 분할의 목적은
 - 현중지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전환을 마무리하는 것
 - 조선 자회사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과 함께, 이후 R&D 등 기술 중심회사로 전환
 - 사업부문별 독립경영 및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 확립

5. 왜 분할을 하는가

-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분할하는 것인가?
 -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도 분할의 이유
- 대우조선해양 인수 방법은 분할만 있는 것은 아님
 - 현대중공업이 직접 인수, 혹은 현대중공업 지주가 직접 인수
- 현중지주는 왜 이런 방법이 아닌 분할인가?
 - 대우조선해양을 현중지주가 직접 인수하면, 그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권 승계에 불리하고,
 - 현중지주가 산업은행의 개입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게 됨.
- 산업은행은 왜 분할인가?
 - 현대중공업이 직접 인수함에 따른 반발 방지, 특혜 시비 차단, 기업결합심사 등 위험 회피

6. 분할 후 지배구조 변화의 의미

- 대우조선 인수 후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 변화의 핵심은 현재의 현대중공업을 다시 분할하여 현중 중간지주회사를 만들고 현중 중간지주회사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주식을 현물 출자하여 주요주주가 되는 것임. 즉 현재 현대중공업 지주회사가 현대중공업 등 조선 관련 자회사도 직접 지배했지만 대우조선을 인수한 후에는 조선 관련 자회사들을 현중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지배하고, 현대오일뱅크 등은 직접 지배하는 방식임. 따라서 수익성 있는 종속회사들을 현대중공업 직접 자회사로 재구조화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현대중공업 지주는 현대중공업 등을 직접 지배하고 있지만, 대우조선 인수 후에는 현중 중간지주 회사가 중간에 있어 간접 지배 방식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지주의 리스크는 줄고, 산업은행이 주주로 남아있음에 따라 정책금융을 받기에는 더 유리한 구조임. 즉 현대중공업 지주의 리스크는 줄고, 수익성은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임.

7. 분할 후 사업목적의 변화와 그 의미

- 분할 후 한국조선해양은 각 자회사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것.
 - 브랜드나 연구 결과를 판매하고 심지어 광고 관련 부분도 중간 수수료를 챙기겠다는 것.
- 분할 후 한국조선해양은 본사를 서울에 두겠다고 정관 개정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분할계획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엽, 이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연금을 포함해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노후자금의 선한 관리자로서 현대중공업의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소위 분할계획서 의안에 반대할 것을 요구한다.

□ 현대중공업은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가칭)을 분할해 존속회사로 하고, 현대중공업을 신설회사로 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재벌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를 원활하게 하고, 현대중공업 재벌총수일가의 지분과 이익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 공무원노조는 대우조선과 조선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남 거제를 비롯한 지역경제의 파탄 가능성은 물론, 수천에 달하는 대우조선 협력 기자재업체, 하청업체들의 몰락, 지금도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수만의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직면하게 될 구조조정의 위협 등 대우조선 매각이 야기할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 국민연금은 작년 7월 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즉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원칙’ 이기도 하다. 공무원연금 또한 올해 중 국민연금을 따라 이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 현대중공업은 올해 3월 말 현재 국민연금이 약 661만 주, 사학연금이 13만여 주, 공무원연금이 8만여 주 등 공적연기금이 전체 주식의 10%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 중이다.

□ 공적연금은 국민의 이익과 공공성을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원칙으로 해야 한다. 대우조선의 재벌특혜 헐값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에 국민의 이익도, 공공성도 지켜내지 못하는 재벌총수 일가만을 위한 결정일 뿐이다.

□ 공적연금은 지역사회를 파탄으로 내몰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나아가 국내 조선산업 전반의 생태계 붕괴를 야기 시킬 수도 있는 사안에 반대해야 한다. 또한 대우조선의 재벌특혜 헐값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 그리고 이를 원활하게 하고 재벌총수 일가의 이익 강화와 경영권 세습 안정화를 위한 수단이 될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에 찬성해서는 안 된다

2019년 5월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명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739-4 철노회관 (우: 150-815) •전화 : 02-4977-888 •전송 : 02-4970-444
•날짜 : 2019년 5월27일(월) •담당 : 박영홍 선전실장 010-8005-7988 •이메일 : kptu2011@gmail.com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분할계획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

- 다가오는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31일)에 상정된 현대중공업 법적 분할계획
에 반대한다

오는 5월 31일 예정된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에 대우조선 인수 등을 위한 조직체계 개편 안건으로서 현대중공업의 법적 분할을 승인하는 안건이 의안 상정돼 있다.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은 직원, 노동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면서 정몽준 현대중공업지주 최대주주, 정기선 부사장 부자에게는 이익을 확실히 보장해주기 위한 시도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이 법적 분할 과정이 경영권 세습을 공고히 하고 사익 편취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분할계획에 반대함과 더불어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주요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해당 안건에 반대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현대중공업 분할 시도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준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은 지속돼 왔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주주총회에 안건 상정을 통해 지역경제 파탄과 협력업체, 하청업체들의 동반 몰락,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감행하려 한다.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을 재벌그룹이 넘겨받으면서, 기존의 손실은 국가와 국민, 노동자가 부담하고 이익은 재벌그룹, 총수일가가 가져가기 위한 시도다.

현대중공업의 지분 중에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각 공적 연기금들의 운용목적에 공히 공공성, 공익성이 반영돼 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 경영권 세습만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를 통해 공적연기금의 원칙을 지켜야한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의 이익과 공공성 사수를 위해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의 분할계획 의안에 공적연기금들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노조는 22만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여 재벌 특혜 정책 반대와 재벌 개혁 실현을 위해 향후 금속노조와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끝)